

박근혜 구속 수사! 박근혜 체제 해체!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대통령 담화는 국민의 뜻에 전혀 답하지 못했다. 명백한 범죄를 무죄라 했고, 결자해지 자세 없이 국회에 해결을 떠넘겼다.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한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다.

퇴진을 둘러싼 은밀한 담합

담화문은 보수언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거국내각-개헌-하야-조기대선>를 따른다. 친박을 제외한 보수세력은 박근혜 게이트 초입부터 이번 사태를 보수 혁신과 재결집을 통한 정권 재집권 전략으로 구상했다. 대통령 하야로 혁신을 거부하는 친박을 제거하고, 개헌을 매개로 집권 의지가 있는 보수 세력을 규합한다는 밑그림이었다.

이런 점에서 11월 29일 3차 담화는 국민에게 퇴진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보수세력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2선 퇴진도, 거국내각도 거부하며 이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폭로가 계속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로 압박해오며, 친박 일부가 이탈하자 탄핵을 앞두고 결국 결정을 내렸다. 사실 보수언론의 박근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를 전부터 감지되기도 했는데, 검찰이 여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통화녹음 등에 대해 기준

과는 다른 입장을 내보낸 것이나, 오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세월호 7시간은 오해”라는 취지의 기사를 동시에 내보낸 것이 시사적이다. 보수세력의 보이지 않는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박근혜 뜻대로 되면 부역자와 공범들 대사면

그런데 국민의 뜻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만약 박근혜 담화문대로 퇴진이 진행된다고 상상해보자. 보수세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박근혜 사면을 지지해왔다. 심지어 야당 대권주자조차 닉슨의 사례를 인용하며 혼란을 줄이고 하야를 앞당기기 위해 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선에서 수사를 받을 것이다.

재벌 총수는 어떻게 될까? 이미 재벌 총수는 최순실 일당에게 강탈당한 피해자로 둔갑 중이다. 청문회가 유야무야되고 검찰이 적당히 빠지면, 예전처럼 이들은 대국민 사과 정도를 하고 이번 사태를 덮을 것이다. 검찰은 김기춘, 우병우 같은 권력의 심장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사태가 정치적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면 검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특검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해도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다

지 실효성 있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박근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것이다.

재벌 총수와 최순실 일당에 대한 청문회도 김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이번 게이트는 깃털에 불과한 최순실 일당 몇 명 잡아넣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모든 쟁점은 개헌과 대선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던 바였는가? 200만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고 기대한 것이 이런 것이었나?

박근혜 체제 해체를 분명하게 내걸어야 정치놀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가 국민 앞에 죄를 털어놓고 사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다. 야당은 어떤 정치적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 거국내각과 개헌을 가지고, 또 탄핵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정치놀음을 하는 순간 박근혜 게이트는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에 휩쓸리고 만다. 특검도 청문회도 모두 김이 빠지게 될 것이다. 지난 4년 간 적당히 타협하며 무능 야당으로 국민에게 심판받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과 청문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고 박근혜 체제의 해

체를 위한 징검다리를 놔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의 뒷돈을 대고 이권을 챙긴 재벌 총수를 처벌하고 청와대, 검찰, 행정부, 국회의 부역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담화문을 계기로 적당히 빠져보려는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의 반성은 대국민 기만에 불과했다.

11월 30일 시민불복종의 날을 거대한 분노의 출발로 삼자. 12월 3일 6차 범국민행동을 청와대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삼자. 박근혜 꿈수 퇴진론에 대한 가장 단호한 비판은 박근혜 체제 해체를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만적 퇴진론이 반복되는 이유는, 박근혜와 정치권이 퇴진을 이 땅의 부조리와 무책임을 뿌리 뽑는 문제가 아니라 퇴진 형태를 둘러싼 정치적 거래와 차기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박근혜를 통해 드러난 부조리한 체제를 크게 변혁하고 싶어 한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문제, 불평등문제, 검경 및 국정원 공안통치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을 이번 기회에 모두 분명한 퇴진 의제로 만들자. 기득권 세력이 정치공학으로 퇴진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촛불이 이 사태를 얼마나 깊고 넓게 생각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라 부르는 지배세력에게 주권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분명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 ●

판을 엮자! 한상균 위원장을 우리 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보수 세력의 재집권 음모와 민주노총의 대응

“질서 있는 퇴진” 뒤에 숨겨진 속내

보수 세력이 전열을 다듬고 있다. 조선일보를 앞세운 보수 세력은 대통령 담화를 통해 야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비박계 좌장이자 여권 대선후보 중 하나인 김무성은 지난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탄핵과 더불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고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개헌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대선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 속내다.

보수언론은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놀랍게도 한 목소리로 <거국내각-개헌-

하야-조기대선>을 향후 정국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 정권과 다음 정권에 관한 보수 세력의 대략의 합의가 있었던 이렇다. 박근혜와 친박세력을 죽여야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던 것이다. 올해 “누가 박근혜와 친한가”를 두고 논쟁하다 총선을 망친 새누리당에게 보수 세력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박근혜 퇴진이 기정사실이 되자 보수 세력은 일제히 광장에 모인 촛불의 열기는 잠재우고,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자는 민중의 열망을 누그러뜨리면서, 이것을 ‘가진 자들을 위한 혁명’으로 정리하

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민생파탄의 원인을 ‘대통령제’에 돌리면서, 다가올 대선 국면을 개헌 이슈로 사로잡겠다는 계산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구출하자!

한편 서울구치소에 갇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인이 되어서도 그치지 않고 서신을 보낸다.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호소하고, 절규한다. 이런 그의 외침은 보수 세력의 재집권 음모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다. 오늘의 촛불의 토대를 닦은 그는 노동자 생존권, 한국 사회의 변

화를 위해 정권 퇴진을 외친 상징이다.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보수 세력의 정치놀음과 고단한 우리 삶의 진정성을 그를 통해 우리는 나눌 수 있다.

시민들의 열망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옥죄어온 부익부빈익빈, 재벌 천국, 노동자 지옥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촛불의 능동적 주역이 되자. 한상균 구속을 둘러싼 지배세력의 기만을 폭로하자. 그리고 박근혜는 감옥으로 보내고,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우리 곁으로 불러오자! ●

삼성 이재용, 구속 안하면 또 털린다!

상습적으로 헌정을 유린하는 재벌 총수들, 이번엔 꼭 처벌해야

* 앞선 두 차례 유인물(12일, 19일 촛불)에서 삼성의 반복된 헌정 유린 역사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로 인한 국민이 무엇을 실제 피해 보는지 살펴봤다. 앞선 글들은 모두 www.pssp.org에서 볼 수 있다.

삼성의 헌정유린, 국민종짓돈 털기는 이제 시작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이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룹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전 합병

도 따지고 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삼성전자 대주주가 또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식 8.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액수로는 시가 20조원이 넘는다.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 시나리오 오는 삼성전자를 지주와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지주를 다시 이재용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와 합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식이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한 이재용이 공짜로 주식 가치를 늘리면 다른 누군가는 주식 가치를 잃는다. 누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민연금이다. 지금 같은 구조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정권 실세에게 돈 몇 푼 찔러주면 이재용을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 보험가입자가 낸 돈이 자산이다. 이재용이 이견회의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고 동시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자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 넷 중 하나는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다.

처벌 받지 않는 삼성 총수는 반복적으로 헌정과 국민을 유린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 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그야

말로 주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해왔다.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이번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유전무죄를 삼성만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

현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방해가 되는 법률이 많다. 아마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또 다시 각종 불법과 정치 로비를 자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털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게 됐다. 다가올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특별페이지 소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보수언론의 주요 기사, 논설을 매일 논평하는 특별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수언론의 속내를 파헤치고 박근혜 퇴진 항쟁이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모색합시다!



www.pssp.org

사회진보연대

검색



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첫걸음, 사회진보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주소 [03984]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Tel 02-778-4001, 4002 FAX 02-778-4006

후원계좌 하나은행 771-910262-85707 (정영선)

www.pssp.org | pssp4001@gmail.com